

東北亞의 經濟協力 方案

張 孟 烈

최근 범세계적으로 경제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에서도 ASEAN, APEC, AFTA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동북아 제국의 세계무역비중이 1993년 세계전체의 20%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1) 각국에 이미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마산, 나진·선봉, 훈춘, 홍콩, 카오슝, 나훗가)를 적극 활용하고 6개 경제특구협의회를 만든다. 2) 동북아 기술공동체를 구성한다. 3) 동북아의 순환 및 연계 철도, 고속도로망, 항만시설,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국제 사회간접자본을 공동 조성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4) 동북아 환경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감시·감독을 하여 환경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한다.

이러한 논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부터 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승격시켜 동북아 경제공동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 동안 시한부로 운영한다. 5)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동북아 국제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일본은 GATT에서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자유로운 기술이전을 허용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며 여타 동북아 제국의 일본에 대한 중상주의적 조치를 감안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序 論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평화공존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는 유엔(UN)이 창설되고 경제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현 WTO(세계무역기구)의 전신)가 창설되면서 미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IMF와 GATT는 자유무역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의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영제국의 시대로부터 대미제국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GATT의 지대한 공헌으로 특히 케네디 라운드 이후 자유무역이 혁신적으로 진행되면서 비교우위론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산업구조는 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비교우위가 없는 산

업은 소멸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의 논리에 따라 자본집약국인 선진제국은 자본집약재 산업에,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은 노동집약재 산업에 특화하게 되었다[Ricardo(1817), Heckscher(1919), Ohlin, (1993)]. 그러나 노동집약재라고 하더라도 노동력만으로는 생산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기술과 자본이 요구된다. 자유무역체제의 초기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업화가 되지 못하여,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노동집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성공을 거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NICs)들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가 성공을 거두어 세계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거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 상대적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1차산업에 특화된 국가들의 문제는 남북문제로 침예한 문제가 되었으며 개방적인 국가들(특히 미국)은 폐쇄적인 국가들이 자유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수확을 챙겨가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국내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제에서도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GATT체제는 지속적으로 혁신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산업구조를 포용하면서 남북문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개방적인 국가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탄생된 것이 GATT를 포용하면서 창출된 WTO(세계무역기구)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 논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또 다른 이념을 싹틔우고 있었으니 新보호무역주의가 그것이다. 자유무역의 논리 속에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발붙일 곳이 마땅치 않았으며 자유무역은 현실보다는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자유무역의 경험은 이러한 논리의 공감대를 넓히게 되었으며 결국 1970년대를 기점으로 신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¹⁾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이나 자유무역이 현저하게 불이익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더구나 상대국의 무역보복이 시작되면 최악의 사태까지도 감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한시적으로 긴급한 경제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국의 양해하에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어 자유무역이론이 陽地論이라면 신보호무역이론은 陰地論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문제의식과 보호무역이론의 매력은 경제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지역주의로 표출되었다. 자유무역주의는 國際主義(Globalism)

(1) 신보호무역주의의 효시를 엄격히 구분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신경제정책으로 보고 있다[신현중(1994)].

로 불리우며 일시에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미국의 주도하에 WTO로 구체화되었다.

반면에 지역주의는 경제블록화로 불리우며 전세계에서 자유무역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므로 경제여건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모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역외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역의 범위를 세계로 넓혀 종국적으로는 세계 전체에서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리로 EU(유럽공동체)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국제주의는 미국의 진보성을, 지역주의는 유럽의 보수성을 대표하는 사상이다.

지역주의는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무역의 이익을 중시하는가 하면 역외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익의 배분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자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와 힘을 합치겠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주의는 국제주의에 따른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유럽 보수세력의 견제심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거대한 미국의 경제력에 대응하려면 유럽 전체가 경제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대등한 경제력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주의는 자유무역이론으로부터 지역주의는 경제통합이론으로부터 경제적 논리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닮아 중요하나 달같이 중요하느냐의 문제처럼 현실에서 우위를 가리기 어려워졌으며 양자는 병존하게 되었다.

양극체제의 냉전체제 하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의 팽창정책을 저지하는 봉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 국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본주의의 패권국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반세기 가 지나면서 과도한 패권유지비용, 일방적이고 무한정한 국내시장의 개방, 베트남 전쟁을 포함한 엄청난 냉전비용, EC(구주공동체)를 포함한 선진제국의 비협조 등으로 미국의 경제적 힘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질서는 재편되어 군사·정치적으로는 양극체제로부터 단극체제로 이행될 것처럼 보였으나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삼극체제(미국, EC, 일본)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부상하는 중국 경제를 예견하여 新4극체제(미국, EU, 일본, 중국)로 이행해 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박태영(1994)).

이와 같은 미국 경제력의 약화와 함께 국제주의에 대립되는 경제블록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EC는 EU(유럽공동체)로 강화되고 북미에서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역)가 창설되어 두 마리의 거대한 공룡 경제블록이 탄생하였다. 아시아권에서도 ASEAN(동남아 국가

연합), APEC(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FTA(아시아자유무역협정)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작금의 이러한 경제블록화 현상은 신지역주의 또는 신경제블록화로 불리우고 있으며 과거 경제블록화가 EC만을 암시하였던 개념이었던 것인 반면 현재는 지역주의가 범세계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東北亞 經濟協力の 必要性

2.1. 國際 政治經濟의 論理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협정이 아니라 국제경제기구로서 국제무역질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간의 무역분쟁이 쌍무적인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차원에서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협의 당사자 뿐 아니라 국제교역질서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GATT가 주로 실물경제 특히 상품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면 WTO는 상품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시켜 국가간에 이동 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였다. 과거 국제물류이동의 일부분만을 통제하던 것으로부터 거의 모든 교역에 대한 통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UR(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GR(Green Round), BR(Blue Round)이 거론되고 TR(Technology Round)이 준비중에 있으며 심지어는 인권 및 동물 보호 라운드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체제는 국제무역질서가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경제블록화이므로 곳곳에서 신국제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EU와 NAFTA 다음으로 강력한 경제블록은 아시아에서 탄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아시아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국가간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다양성, 이질성, 역사와 전통의 차이 등으로 하나의 단일 경제권의 형성은 현실성이 희박하여 아시아내의 소지역별로 경제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제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발전이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동북아의 개발도상국 경제체제에 대하여 WTO의 무한경쟁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WTO체제 하에서 東北亞 諸國의 공동대처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모든 선진국들이 발전 초기에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전략산업을 개발하고 유치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웠는데 이제 갓 출발하는 신흥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이다.⁽²⁾

2.2. 經濟的 利益의 論理

경제협력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Elkan은 국제간에 있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逆流效果(Backward Effect)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1차상품 수출을 공업품 수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icks는 경제발전에 대한 자본축적의 공헌에 착안하여 저축을 능률적으로 투자로 전환하는 능력은 부존자원의 다양성과 시장규모에 좌우되는 데 시장규모가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시장규모확대를 위하여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기타는 <表 1> 참조].

3. 東北亞의 經濟協力과 經濟블록化

3.1. 東北亞 經濟圈의 正義와 規模

지리학적으로 아시아는 자연과 인문을 고려하여 북부아시아(시베리아), 중앙아시아(내륙아시아), 동아시아(중국대륙, 한반도, 일본열도), 동남아시아(인도차이나반도, 말레이제도), 남부아시아(인도대륙), 서남아시아(중동)의 6개 지역으로 나뉘며 동북아시아는 정의되지 않고 있다.

<表 1> 經濟協力の 必要性

경 제 학 자	필 요 성
Linder	외국환 gap의 해소책
Nurkse	공업화
Singer	시장확대
Elkan	공업화
Hicks	자본축적
Johnson	공업선호
소도청(小島情)	제3국의 우월한 경쟁력에 대항

資料: 배기형(1993).

(2) 일본은 이러한 점에서 자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결국 동북아시아는 국제 정치·경제학자들이 국제 정치와 경제학적인 목적에 따라 편의상 정의한 것이므로 지리학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범위에 논란이 될 수 있다[요용석(1993)]. 일반적으로 협의의 동북아와 광의의 동북아로 정의될 수 있다. 협의의 동북아는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 동북·발해·황해 연안의 성·시 그리고 극동지역을 포함하며 環황해 경제권이나 環동해 경제권은 여기에 포함되는 작은 협력권이다. 광의의 동북아는 인문지리적 구분에 따른 동아시아와 북부아시아를 합친 지역으로 정의되는데 북으로는 북극해, 동으로는 태평양 연안, 남으로는 남지나해, 서쪽으로는 우랄산맥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광의의 동북아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홍콩, 몽골, 그리고 러시아이며 중국학자들이 정의하는 동북아 제국과 일치한다[오용석(1994)]. 본고에서는 동북아의 구속적인 경제블록화로부터 비구속적인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고자 함으로 광의의 동북아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동북아 경제권의 개략적인 경제규모는 <表 2>와 같다. 동북아 경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총 GDP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25%에 육박하고 인구는 세계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교역량은 세계 전체의 20%에 달하여 거의 미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의 거대한 경제집

<表 2> 主要經濟指標(1993)

	면적 (천Km ²)	인구 (백만)	GDP (\$10억)	1인당 GNP (\$)	성장율 (%)	수출 (\$백만)
한 국	99.3	44.0	331.3	7,670	5.5	82.2
일 본	378	124.8	3,790	31,450	0.0	351.3
중 국	9,561	1,185	541.0	490	13.4	91.8
러시아 ¹⁾	1,707.5	149.0	374.02)	2,510	2.0	40.0
북 한 ¹⁾	12.3	21.9	20.92)	953	1.2	0.9
대 만	36	20.9	316.0	10,565	6.1	84.9
홍 콩	7,682.3	2.8	44.3	17,860	5.5	74.2

註: 1) 1992년도

2) GNP

3) km²

資料: The World Bank(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IMF(199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IA(1993):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The World Atlas, 25th

단으로 성장하여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80년대 선진국이 2%, 세계 평균 5%의 성장율을 나타낸 데 비하여 동북아 지역은 평균 7%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무역 의존율과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형순(1994)은 “1971년부터 1990년까지 약 2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수출과 역내무역은 2배 증가했으며 EC의 경우 세계수출은 다소 증가했으나 역내무역은 정체상태이며 NAFTA의 경우 세계수출과 역내무역이 모두 격감했다.” 그리고 “1992년말 동북아 지역의 무역액은 NAFTA와 비슷하나 EC보다 적다. 이지역 국가들은 매년 무역의존율과 무역신장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등의 시장경제 편입과 일본, 한국의 무역주도정책에 근거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셋째,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상호 경쟁적이다. 이는 <表 3>에 나타나 있듯이 자본과 기술 및 노하우는 일본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한국과 대만, 홍콩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노동은 중국과 러시아가 풍부하고 북한은 약간의 여유가 있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상호경쟁적이므로 숙련노동력과 미숙련노동력, 유형자본과 무형자본, 고급기술과 저급기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各國의 構想

東北亞 經濟圈(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9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권의 협력발전문제 세미나(東北亞經濟圈合作發展問題研討會)’에서였다.

<表 3> 生産要素 賦存狀態

	노 동	자 원	자 본	기 술	경영노하우
한 국	O	X	O	O	O
북 한	O	O	X	X	X
일 본	X	X	◎	◎	◎
중 국	◎	O	X	X	X
러 시 아	X	O	X	X	X
대 만 ¹⁾	O	X	O	O	O
홍 콩 ¹⁾	X	X	O	O	O

註: 1) 신규삼입

資料: Ding Shi-cheng(1997).

그 후 중국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의 통일된 구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지방정부와 학자들의 논의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관점은 동북지역의 자연적 경제발전의 정도와 구조상의 격차는 비교우위가 뚜렷하여 역내 국가간의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중국학자들은 D-N-U 횡적 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D는 선진국으로 일본을 지칭하고 N은 신흥공업국으로 한국을 가리키며, U는 후진국으로 중국과 북한을 의미한다.⁽³⁾ 이것은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적 비교우위에 따라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학자들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주장하되, 구상이 너무 방대하여 현실성이 적다면 환황해 경제권을 구축하여 중국, 대만 홍콩, 및 남북한이 이에 참여하자고 제안하였다.⁽⁴⁾ 그러나 일본이 배제된 소경제권은 현실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최근에는 황해 및 발해 경제권을 제안하여 한국의 서해안, 일본의 규슈, 중국의 랴오닝·허베이·산둥·장쑤와 베이징·톈진·상하이로 중심으로 중국, 한국, 일본이 참여하여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불가능하다면 소규모의 황해 및 발해 경제공동체라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 4월 소련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대표를 초청하여 개최한 '日本海-90' 국제회의에 불참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주변국들(특히 중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심을 높이자 점차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7월 장춘에서 열린 미국 하와이 東西센터(East-West Center)와 중국 아시아 태평양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1차 '東北亞 經濟 및 技術 發展 國際會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만강 삼각주 종합개발계획을 위시한 동북아 경제협력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주관의 동북아 경제협력회의에 적극성을 보여 '羅陳 先鋒 開發計劃'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제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지만 아직도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

(3) 원래 D는 일본과 소련을 의미하였으나 소련붕괴 이후에는 일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현재의 러시아(구 소련)는 분류한다면 U에 포함될 것이다.

(4) 환황해권의 제안은 1988년 9월 일본에서 환일본해 경제권 논의가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989년 1월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연구소의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배하므로 경제논리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인가는 확신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1990년 10월 24일 공화국 최고회의를 통하여 沿海地方(Primorskii krai)의 나흐카(Nakhodka)에 自由經濟地代(Svobodnye Ekonomichesker Zohy) 설치를 결정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개방하여 본격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하려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러시아에는 12개의 자유경제지대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직 정체상태에 있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역내의 관련 경제특구들과 상호 연계발전될 것이므로 러시아의 경제특구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심의섭(1994)].

일본은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1988년 9월 논의되기 시작한 ‘環日本海 經濟圈’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환일본해 경제권은 동해를 내해로 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중국의 동북아 경제권의 범위와 유사하다. 기타 규슈의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環黃海經濟圈’의 구상도 있지만 동북아의 개념보다는 지역개발의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것은 국제 정치 경제 여건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선진국으로서 WTO의 기본 정신과 상치되는 경제블록화에 적극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미·일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동북아 경제에 소극적인 또 다른 원인을 살펴보자. 일본은 경제나 기술면에서 아시아지역 발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으며 지역내 무역량이 증가하고 특히 동북아시아 내에 자회사나 계열사를 가진 다국적기업들의 기업내 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 커다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리더쉽을 장악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주변제국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나 이해관계를 주변에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쉽 강화를 위하여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對아시아정책은 다국간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구속을 받는 지역 경제블록화보다는 무역과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기능적 통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일본은 전세계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블록화는 일본의 시장을 축소하

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APEC과 같이 대화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EU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지 않는한 공식적으로는 지역 경제블록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장병익(1993)].

동북아의 기타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국제학술회의 참석,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부주도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비하여 중국과 일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간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연구회조직,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지역 조사 및 시찰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인 부문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성을 띠고 있다.

4. 東北亞 經濟協力 方案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정치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 둘째 국제 군사·정치·경제적 갈등의 완화 방안, 셋째 경제협력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 끝으로 홍콩의 역내 경제협력에서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협력권의 형성이 늦어지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해결하기 힘든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중국의 개혁 개방이 진행되고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체제적 이질성이 상존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미국, 일본, 러시아간에 이 지역과 관련된 이해가 상충되는 요인들이 잔존해 있다.

따라서 대규모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국지적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으며 경제적으로 북동아제국이 하나의 경제협력권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국가의 규모, 경제발전정도, 인구분포 등의 격차가 너무 크고 각국의 경제정책이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

성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저해요인들을 선결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4.1. 政治體制의 異質性의 克復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간 정치체제가 다르고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를 굳게 지키려고 하고 대외경제관계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국제 경제협력의 기본 전제조건인 자유와 경쟁에 입각한 인적, 물적 요소의 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고 있다.

체제의 변혁에 관한 문제는 경제외적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양체제가 대립보다는 차이점을 인정하고 국제경제거래에서 필수적인 조건은 충족시키면서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정경분리의 원칙은 인정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활동을 내국인의 자격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 및 무역거래를 자유롭게 하면서, 자유로운 투자수익의 송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결조치와 같은 통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핵문제, 남북한 대화의 문제 등은 언제든지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제거되어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가 가능해져야 동북아 경제협력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이전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한국도 똑같은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하기를 주장한다면 함께 참여하여 주변국가들의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책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지 못하고 통제사회로 남아 있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민주화 요구로 발생할 정치·사회적 불안정,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제국의 인권탄압 중지요구로 인한 외교적 마찰은 WTO체제를 위협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 정치발전 단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역량에 달린 문제이다. 과정은 결국 국제적으로 마찰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수용하면서 국내적으로 발생할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된다.

경제적 이유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거래와 투자의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사회에는 본질적으로 정책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무역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언제 민주화 요구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야기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자와 무역거래의 위험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중앙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길이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보장한다고 공표하여서는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와 무역을 발생시키려면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련 국가들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최선의 길은 동북아 경제블록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다.

러시아는 정치, 사회의 근본체제를 바꾸기 시작했지만 개혁의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현재로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러시아가 거론된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즉 러시아가 옛 소련의 대외채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상환능력이 불투명하여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매우 낮으며 러시아내의 지역이기주의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동북아 경제협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극동 시베리아의 개발에 관하여도 러시아 중앙정부와 당해 지방정부간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여 확실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족간, 지역간 갈등과 알력은 시베리아의 분리 독립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가미되어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체제의 문제 이전에 국내 정치의 안정을 달성한 후 다음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2. 國際 軍事·政治·經濟的 葛藤의 解消

냉전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 반면 지역의 리더를 인정치 않고 서로가 지역의 리더가 되려고 함으로서 국제 군사·정치·경제적으로 갈등이 잠재해 소규모의 분쟁의 소지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이 지역의 리더였으나 현실적으로 리더의 능력을 갖춘 국가는 일본이며,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동북아 제국이 그것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UN의 平和維持軍(PKO)에 참여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에는 관망의 자세를 보여 그러한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제국은 쓰라린 역사의 교훈을 아직 잊을 수 없고 일본의 대외 정치 경제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과거를 회상시키는 불신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일본의 능력과 기여도에 비하여 역할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

일본이 소극적이 되고 일본이 제외된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속빈 강정이 될 것이므로 난항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오히려 아시아·태평양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펴 전체적으로는 APEC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동북아에서는 정치적 지배력을, 동남아에서는 시장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엔經濟圈(Yen Bloc)’을 형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본은 미국이 GATT와 WTO 체제에서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동북아 제국은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극단적으로는 중상주의적 또는 제국주의적 사상을 저변에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이 이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과감한 기술이전 노력, 동북아 지역내 무역에서의 무역흑자의 과감한 축소정책, 후발국 원조정책 등 미국이 했던 것과 반대의 정책을 계속 적용한다면 동북아 제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군사대국화에 대한 의심까지 받게 된다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공식적인 개선 약속이 있다면 응당 동북아 제국은 일본에게 커다란 역할을 맡길 준비를 하여야 동북아 경제협력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군사적으로 미·일·중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지만 지역내의 국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4.3. 經濟協力の 前提條件 造成

지역 경제블록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조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 조건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정치적 공동이익의 추구에 경제발전단계의 동질성, 지리적 근접관계, 제정책의 조화 및 문화적·역사적 동질성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表 4〕 참조.

경제협력의 조건 중 가맹국간 경제구조가 경쟁적인 경우가 유리한가 또는 보완적인 경우가 유리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완적 경제간의 경제협력이 경쟁적 경제간의 경제협력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보완적 경제가 서로 다른 자원과 생산패턴을 보유함으로써 각국이 가장 적합한 상품생산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Viner(1950)는 이와 반대로 동중산업에서의 단위 생산비차가 클 경우 경쟁적 경제간의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무역전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表 4〉 經濟協力の 條件

경 제 학 자	조 건
Deniau, J.F.	① 경제발전 수준의 균등, 경제의 성격과 잠재력에 있어서 이질성 존재 ② 가변성의 여지와 조정의 여지 ③ 특화의 기회
Sannwald, R.F.	① 지리적, 문화적인 관계 ② 공통이해관계 ③ 경제의 보완적인 구조 ④ 타국에 대한 수급 능력의 확보 ⑤ 대량생산의 이익취득 가능성
Theorbecke, E.	① 통합체의 규모 ② 통합체의 경제규모 ③ 경쟁구조의 경쟁성
Viner, J.	① 가맹국간의 관세의 완전철폐 ②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공통관세 설정 ③ 관세수입의 가맹국에의 배분합의
Kahnert, F.	① 구성국 상호간의 유사한 경제발전단계 ② 역내교통조건의 준비(지리적 인접국가) ③ 경제정책운용의 조화와 타협 ④ 이익분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
Tinbergen	① 무역제한이나 무역장벽의 제거 및 생산요소이동의 자유화 ② 자유화를 위한 감시수단의 필요 ③ 자유경쟁의 효율적인 작용을 위한 수단과 정책

동북아시아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생산요소의 부존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경제는 경쟁적인 성격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이익은 더 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북 무역보다는 동서무역의 규모가 더 크듯이 경제협력을 시작하더라도 초기에는 협력의 규모나 정도가 낮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적극성을 띠기 어렵다.

동북아시아는 경제협력의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리적 인접성만을 만족시키고 정치제도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국가규모, 크기 및 경제발전단계의 유사성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치제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정책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한 동북아 경제장관(주로 재무, 상공, 경제기획 분야)회의를 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규모, 크기, 경제발전의 단계의 격차가 크므로 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우위의 국가가 열위의 국가에 양보하고 그를 보호하여 일체감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김화섭(1996)].

4.4. 새로운 홍콩과 東北亞 經濟協力 機構

이러한 여건하에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어 경제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域外國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제도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도시국가 이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중국은 일본과의 연계고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경제협력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경제의 핵심이 되어 황해와 동해(일본해)에 접한 지역들을 연결하여 홍콩, 타이페이, 상하이, 도쿄, 서울, 나진·선봉지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협력을 추구할 때 가장 취약하였던 기술, 자본, 경영, 시장제도에 익숙한 인력 등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홍콩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본주의국가와의 이질성을 줄여 경제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 얻어야 했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홍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홍콩의 본토 반환이 오히려 경제협력에 관한 중국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4.5. 東北亞 經濟協力的 方向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각국의 입장차이는 경제블록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각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해관계도 정립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점진적인 추진의 1단계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시장접근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듯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부문부터 기능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본이 첫 단계에서 머물려고 한다면 중국은 2단계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단계에서 기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은 첫째 무역과 자본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역내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북아 국가 전체 무역량의 역내 무역 비중이 1980년 8%에서 1991년에는 29.2%에 달하게 되었다[이효선(1995)]. 동북아시아에서도 자본의 협력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선진경제로부터 후발경제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생산요소의 국가간 결합형태로 진행될 경우 손병해(1991)는 참여국가들간 공동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지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국지적 경제통합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산업에 대하여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

이다. 각국이 하나 이상의 자유무역지대나 도시를 선정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개념이다.

또한 홍유수(1995)는 EU의 ETC(European Techonology Community)와 유사한 동북아 기술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능별 협력은 국제적 공공재를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으로 육로 국제 교통망의 확충(고속도로·철도), 금융, 유통, 통신, 전산망 등의 서비스산업의 체제 확립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또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지역 경제협력에 커다란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5. 맺 음 말

동북아 제국의 세계무역비중은 1993년 세계 전체의 2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NAFTA와 비견되는 수준이며 EC에는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동북아 제국의 무역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여 경제협력의 현실성을 타진하여 보자.

첫째, 역내 상호 무역 의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1980년에 역내 무역의존율이 8% 내외에 불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29.2%에 이르러 역내 경제의 상호연계성이 점점증하고 있어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둘째, 동북아 국가의 역내 무역상품구조는 對 세계무역 상품구조와 비슷하여 경제블록화가 이루어 질 경우 역내에서 교역문제를 거의 전부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 제국의 對세계무역 상품구조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은 공산품 수출, 1차 산품 수입 구조로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공산품 수출과 공산품 수입 구조로 된 반면 러시아는 1차산품 수출과 공산품 수입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역내 수출 경쟁 및 보완 품목을 분석하면 경합관계에 놓여 있는 상품들이 많았다. 한국과 일본은 자본 및 기술 집약상품에서, 한국과 중국 및 북한은 자원 및 노동 집약 상품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일부 중기계제품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이어서 경제협력이 되면 각국에 큰 이익이 되므로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청석(1994)].

동북아의 경제협력방안을 종합하여 보자. 1단계에서는 현재의 자연발생적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1) 구체적으로는 각국에 이미 설립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예: 한국의 마산 수출자

유지역, 중국의 훈춘 및 홍콩 특구, 대만의 카오슝 자유무역지구,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경제지역의 나훗가 자유무역지역과 하산 지구 등 마산, 나진·선봉, 훈춘, 홍콩, 카오슝, 나훗가의 6개 도시)를 적극 활용하고 6개 경제특구 협의회를 만들어 무역 및 투자 조건 및 여건을 통일할 수 있다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와 함께 동북아 기술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경제블록화의 이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경제협력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의 순환 및 연계 철도 및 고속도로망, 항만시설, 항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史敏(1996)].

4) 또 환경문제는 단순히 당해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기 쉬우므로 동북아 환경감시위원회를 설립하여 감시·감독을 하고 환경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5) 이러한 1단계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위하여 2단계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민간주도국가도 있고 정부주도인 국가도 있던 것에서 정부차원으로 논의를 승격시켜 동북아 경제공동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년 동안 시한부로 운영하면서, 각국의 상이한 견해를 좁히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준비위원회의 발족은 연구 토론의 장이므로 참여의사가 없는 국가가 없겠지만 참여의사가 없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추후에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운영한다. 즉 현재와 같은 학술세미나 이외에 정부차원에서 공식적 구상을 토론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6) 제2단계 경제협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첫째,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의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경제협력의 성격이 시장제도적 접근방법이므로 기본적으로 국제경제거래에 관하여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제적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거래에 관한 경제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동북아 국제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7) 둘째, 동북아 경제의 힘과 저력의 대부분이 일본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 동북아 지역경제에서도 큰 역할을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Dwight H. Perkins(1995)의 지적대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북

아 제국의 경제성장이 신중상주의정책의 채택으로부터 가능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이제 그가 지적한 대로 경제협력을 하려면 동북아 제국모두가 신중상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 양보하여야만 경제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1인당 GNP가 중국의 65배를 넘는 일본이 중국과 같은 중상주의식 태도를 견지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하고 국제적 마찰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GATT에서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자유로운 기술이전을 허용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며 여타 동북아 제국의 일본에 대한 중상주의적 조치를 감안해 줄 수 있다면 동북아 제국은 일본에게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정부차원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준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일본은 과감한 양보가 힘들고 동북아 제국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기 어려워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각오가 필요한 것 같다.

慶南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631-701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

전화: (0551)49-2442

팩시: (0551)23-1655

參 考 文 獻

- 김명선(1996): “환발해 경제권에 대한 전망: 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방안 모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김화섭(1996):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요건 분석,” 『韓國國際經濟學會 冬季學術大會 發表論文集』.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1991):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12월.
- 박태영(1994): 『신4극체제하의 경제전략』, 동문사.
- 배기형(1993):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 서청석(1994):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의 방향과 대책,” 『지역경제』,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1-12.

- 손병해(1995): 『경제통합론』, 법문사.
- 손병해(1991): “국지적 경제통합모형과 동북아 경제권, 선형 자유무역지대론의 전개,” 『제 28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韓國國際經濟學會.
- 손병해(1994): “신지역주의 전개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따른 동아시아의 지역내 경제협력 방안,” 『韓國國際經濟學會 冬季學術大會 발표논문집』.
- 신현종(1994): 『무역정책론』, 박영사.
- 심의섭(1994): “러시아·북한·몽골: 개방의 발판으로서의 동북아,” 『동북아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길벗, 서울.
- 이형순(1994): “21세기의 아시아와 한반도의 역할,” 『제5회 국제심포지움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 오용석(1993):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남북한 경제관계의 전망,” 『동북아 경제권과 한민족의 역할』, 서남재단 및 經濟正義研究所.
- 오용석(1994): “경제잠재력은 커도 블록화 저해요인 많은 동북아,”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길벗, 서울.
- 이효선(1995): “북한의 선봉경제무역지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지역사회개발연구』, 韓國地域社會開發學會, 12월.
- 장병익(1993):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의 구상과 역할,” 『지역연구』 2.3, 서울대학교 地域綜合研究所.
- 홍유수(1995): 『동북아 지역기술협력체의 구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2월.
- 史敏(1996): “동북아 경제협력과 황·발해 경제권의 발전전망,”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방안 모색』,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Dwight H. Perkins(1995): “21세기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전망,” 『21세기 동북아시아, 광복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동아일보·인민일보·조일신문 주최, 81-3.
- Ricardo, D.(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London.
- Heckscher, E.F.(1919):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Ekonomisk Tidskrift*.
- Ohlin, B.(1933):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Viner, J.(1950): *The Customs Union Issu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ew York.